

내일부터 '딱 한잔' 도 걸린다...음주운전 기준 낮아져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상향 기준에 따른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이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은 0.03%로 강화된다. 기존 하한은 0.05%였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혹



가 식당, 유흥지 등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

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사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등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시점 맞춰 단속 기준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가능 야간 시간대, 유흥가·전용도로 진출입로 집중 전국·지방청 단위 동시단속도...경찰, 자체점검

또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카카오·네이버·티맵 등 내비게이션 속 음성안내·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버스광고·현수막·카드뉴스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

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 기간은 1회의 경우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변경된다. 특히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내용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때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제의 사유 기준은 현행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변화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자의 경우 착한운전자일지 여부 점수를 사용하는데 제한도 생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다양한 지원... 2천개 육성 순항

282개 증가 총 1202개
협동조합 782개 '최대'
유통지원센터 연말까지 조성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이후 설정한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선7기 들어 5월 현재까지 282개가 증가한 총 1302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8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마을기업 240개, 사회적기업 196개, 자활기업 84개 순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성장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또 신용·담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165개 기업에 74억 원의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해 15건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했다.

기업 유형별 재정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에 107억 원을 들여 75개 기업에 재정지원을 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고도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16개를 대상으로 4억 원을 지원, 경영 여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장려했다.

앞으로도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공구매 상담회, 임철가점제 확대, 목포 순천 나주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전남사회적경제본부상단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규모화된 판매 서비스 확충 등 공공

구매 제도 정착 및 민간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관광상품 공모를 통한 특색있는 제품을 집중 발굴해 시군 관광상품 판매장 입점, 판매장 조성 시군에 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제품 판매 환경 조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통 및 협력 등 교류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희필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민선7기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 및 노인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충족하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한전공대 '윤곽' 드러난다

27일 균형위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회 최종 마스터플랜 오는 8~9월께 확정 계획



산학연 클러스터가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곧 드러난다.

23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공대 설립과 운영계획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이 오는 27일 오후 3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열리는 한전공대 법정부설립지위원회 보고회에서 공개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화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이 요약집 형태로 공개된다.

용역안 요약집에는 건학이념, 학

생·교직원수, 교과체계, 운영방향과 대략적인 설립비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보고회를 통해 공개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을 정부부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되면 용역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한 축을 차지하는 캠퍼스 조감도가 포함된 '건축설립 기본계획안'은 이번 보고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전 관계자는 "건축설립 기본계획 용역안까지 포함된 '최종 마스터플랜'은 오는 8~9월께나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비는 캠퍼스 건축설립 기본계획안까지 확정돼야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해 관계자 협의를 마치고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안'이 확정되면 9월께 '학교법인 설립을 추

진하고 이후 '공대 설립안'을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공대 설립을 위해 전문 용역사인 'A.T.Kearney' (A.T 커니)를 통해 '학교·교과체계·운영방향, 캠퍼스 건축 방향'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해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최종 마스터플랜'은 올 2~3월로 연기됐었다.

한전은 이후 올 상반기(6월말) 내로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짓는다고 계획했지만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오는 8~9월께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한전이 확정짓게 될 '최종 마스터플랜'은 용역사의 보고서 제안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체 추진 계획을 반영해 완성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